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

박병광*

- I. 들어가는 말
- II. 중국의 적극적 개입 배경
- III. 북핵에 대한 중국의 시각과 입장
- IV. 북핵에 대한 중국의 목표와 정책방향
- V. 6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역할
- VI. 맺음말

최근 한반도에서는 '제2의 북핵위기'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북핵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변국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과 대응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원칙으로, 1)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유지, 2) 한반도에서 비핵화의 달성, 3) 외교적 대화와 타협의 방식을 통한 해결 등 세 가지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중국의 시각은 기존의 북·중 관계의 틀을 '지속'하려는 측면과 보다 전향적인 '변화'의 과정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시각이 병존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가 동아시아의 불안을 조성하고 중국 개혁개방과 국가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해서 거부반응과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궁극적으로 중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을 단념시키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 강·온의 양면책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

*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

해 매우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중국의 이러한 노력과 역할은 '3자회담' 과 '6자회담' 을 주선함으로써 명백히 드러났다. 중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대한 전략적이고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에 개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對美 관계의 개선은 물론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노리고 있다. 비록 현재까지 다자회담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으나 북핵위기의 해법을 모색하려는 중국의 역할은 앞으로도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주제어 북한, 중국, 한반도, 핵문제, 비핵화, 6자회담

1. 들어가는 말

최근 한반도에서는 '제2의 북핵위기' 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美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방북했을 당시 북한의 강석주 제1외무부상이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 개발을 시인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는 다시금 국제적 사안으로 대두하였다. 1990년대 초반에 발생했던 북핵위기를 '제1차 위기' 로, 2002년 10월에 발생한 위기를 '제2차 북핵위기' 로 간주한다면 제2차 위기는 제1차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드러내며 문제의 심각성도 더욱 큰 사안이라 할 수 있다.¹⁾ 무엇보다도 지금의 북한은 과거와 달리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함으로써 일본은 물론 잠재적으로는 미국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반면에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혐오감과 敵對視 정책을 공공연히 드러냄으로써 양측의 대결구도가 첨예화된 상태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을 포함한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근본적

1) 제1·2차 북핵위기의 차이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마크스트(Armacost 2003, 2-3)를 참조.

으로 달라졌으며 그 결과 제1차 북핵위기가 핵 ‘동결(freeze)’ 수준에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데 비해, 제2차 핵위기는 동결이 아닌 ‘제거(disarm)’의 대상으로 간주된다고 하겠다(이춘근 2003, 50).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이후 한국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 핵문제의 해소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당초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대화와 타협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할 뿐 적극적인 역할수행을 주저하였다. 뿐만 아니라 2차 북핵 위기의 등장 초기에는 오히려 북한의 ‘불가침조약’ 제의를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보이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카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유지에 집착하는 면을 보이기도 하였다.²⁾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자국의 정치, 경제, 외교적 고려에 기초한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 정부 및 국제사회가 중국의 역할을 충분히 유도하지 못한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은 후진타오(胡錦濤) 체제가 등장한 이후 ‘베이징 3자회담’(2003/04/23)을 성사시킨 데 이어 노무현 대통령 방중(2003/07/07) 이후에는 북한과 미국에 특사를 파견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통해 ‘6자회담’(2003/08/27)을 성사시키는 등 건설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변화는 한반도정세가 중국에 갖는 의미가 각별하기 때문이며, 핵 위기를 고조시키는 북한의 태도에 실망하여 이전까지의 후견인 역할에 연연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미국을 견제하면서도 협조해야하는 딜레마속 외교전략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핵심 당사자인 미국은 공식적으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하고 있으며 미국의

2) 北核 위기가 재등장한 2002년 가을 중국 관영통신사인 新華社의 북핵관련 기사타전을 살펴보면 통상 한국정부나 미국정부의 발표나 반응은 자주 생략하는 반면, 북한의 발표나 제안에 대해서는 평양발로 신속하고 상세히 보도함으로써 미국을 견제하고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다. 또한 북한의 제의에 대해 논평이나 분석을 가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피하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03/10/29).

이러한 입장 역시 중국의 증재기능을 뒷받침하고 있다.³⁾

북한 핵문제는 아직도 진행중인 사안으로서 중국의 역할과 성과에 따라 문제의 향배가 좌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21세기 동아시아에서 중화질서(中華秩序)의 재현을 꿈꾸는 중국으로서는 북핵위기와 같은 지역분쟁문제에서의 적극적 역할수행을 통해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 그리고 역할분석을 통해 우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단서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문제에 관련된 중국의 향후 역할에 관하여 일정한 함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절에서는 중국이 과거와 달리 제2차 북핵위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배경을 분석하고 제3절에서는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는 중국정부와 학계의 시각과 입장을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정부의 목표와 정책방향을 고찰하고 있으며 제5절에서는 ‘6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역할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6절에서는 중국의 향후 역할에 대한 전망과 우리의 정책고려사항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다.

II. 중국의 적극적 개입 배경

중국은 북핵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변국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과 대응에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3) 북핵문제가 다시 불거진 2002년 10월 부시 대통령과 江澤民主석은 텍사스 정상회담에서 ‘위기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였으며, 이후 2개월 사이에는 미국은 이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토머스 파고 태평양 합대사령관 등을 잇따라 중국에 파견하여 북핵문제에 관한 중국의 역할을 요청하였다 (연합뉴스 2003/12/16).

중국은 북핵위기의 해소를 위하여 다자적 접근을 주장해온 미국의 의도와 달리 한동안 북·미 양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이 현재의 북핵위기를 조장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묵인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석마저 대두하기도 하였다 (Bandow 2003, 8-10). 이러한 시각은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제어할만한 잠재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징 3자회담 이전까지는 그 위기를 해결하는 데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이 처음부터 북핵위기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첫째,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상당한 경제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지 몰라도 북한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중국은 미국의 반테러노선에 부응함으로써 정치적, 경제적 실용주의노선을 추구했으며 이러한 현실은 북한에 대한 우려감을 낳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즉 북·미간의 대결이 극한으로 치달았을 때 중국이 취할 태도에 대하여 북한의 확신이 명백하게 정립되지 않는다면 북핵위기의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북핵위기가 해결될 경우 동북아에서 미국의 대북한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중국은 자신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봉쇄정책이 강행될 것을 우려하였다고 보겠다. 따라서 중국은 북핵위기의 해결 이후에 재편될 동북아의 국제질서에 대하여 구체적 청사진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불리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셋째,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둘러싼 논쟁은 미국의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의 우려를 자아냄으로써 한국, 미국, 일본간의 이견을 노출시키는 한편 냉전시대의 북한 동맹국들이었던 러시아와 중국을 밀착시키는 효과도 낳았던 것이다(이종선 2003, 12-13). 이러한 점들은 궁극적으로 북핵문제의 발생 초기에 중국이 북핵위기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2003년에 들어서면서 중국이 북핵위기의 해

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나섰다라는 점은 주목할만하다고 할 것이다. 일단 중국은 클린턴 행정부와 현재 부시 행정부의 對北 인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문제 해결을 위해 동원 가능한 구체적 대응 전략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문제를 계속 방치할 경우 한반도 평화유지와 영향력 확대라는 자국의 정책기조를 뒤흔들 수 있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더욱이 이라크 전쟁을 조기에 종식함으로써 미국의 현실적 힘을 보여준 ‘바그다드 효과’라는 변수 역시 한반도 주변정세의 안정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 개입을 자극했다고 볼 수 있다.⁴⁾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개입을 이끌어낸 배경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개입 배경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중국의 對한반도 전략목표 유지: 중국의 對한반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으로서 북한의 핵개발은 이러한 목표달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중국지도부는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타국에 대한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원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간섭’이나 ‘개입’은 피해 왔다. 그러나 한반도의 핵위기에 따른 역내 불안정이 분명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소극적이고 비공개적인 역할로는 문제의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하였다고 보겠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될 경우 미국은 물론 일본과의 군사적 충돌까지도 상정한 긴장국면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북한 핵을 발미로 日本의 군사대국화, 臺灣의 核보유의지 촉발로 이어지게 된다면 중국으로서는 자국의 동북아질서 주도권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발전을 최우선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중국은 한반도의 불안정이 자국의 경제발전에 미칠 부

4) ‘바그다드 효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브레너(Bremner 2003)를 참조하라.

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전향적 개입을 통해 對한반도 전략목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중·미관계의 안정적 발전추기: 중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선 배경에는 '미국 요인'이 작용한다고 하겠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능력을 재평가하는 한편 역내 강대국으로서 국제적 주요 사안에 대한 해결노력에 동참함으로써 그들이 주장해오던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는 고려가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김태호 2003, 57; Kim and Lee 2002, 110). 또한 미국과의 교역액이 9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응하여 북핵문제를 접근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협조대가로 경제적 실리를 취하는 '실리외교' 노선도 작용하였다고 보겠다. 실제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해야만 하는 胡錦濤 중심의 새로운 지도부로서는 미국과의 관계증진이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한·미·일의 실질적 가치 및 의존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으로 인한 주변국과의 관계악화를 원치 않고 있다 할 것이다.

3) 중국 新지도부의 對북한 인식변화: 중국은 胡錦濤 중심의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한 이후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입의사와 해결태도를 보여왔다. 이는 중국 지도부가 세대교체로 인해 북한에 대한 인적·이념적 연대성에서 오는 제약에서 탈피하여 국가이익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바탕으로 중·북관계를 이끌어가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⁵⁾ 90년대 중반부터 중국과 북한 혁명원로들의 사망은 자연스럽게 양국 지도부간 연계부족으로 이어졌고 두 나라 집권엘리트들의

5) 중국 新지도부의 등장에 따른 중·북관계 변화에 대해서는 박병광(2003, 197-225)을 참조.

단절현상을 심화시켜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 중국지도부의 對북한 인식은 과거 지도부와는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중국의 4, 5세대 지도자들의 상당수는 내면적으로 김정일 체제의 리더십을 포함한 북한의 정치·경제상황에 회의적이라 할 수 있다.⁶⁾ 그 결과 胡錦濤 체제의 등장으로 중·북간 특수관계의 근본적 청산이 가능해졌고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이익과 상호주의 원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고 하겠다.

결국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태도변화를 불러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북핵위기의 해결이 자국의 이해관계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핵위기로부터 사실상 위협을 받지 않고 오히려 부수적인 이득을 얻는다고 판단할 경우 중국은 적극적 개입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제2차 북핵위기의 고조가 경제발전을 비롯한 자국의 국가이익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침은 물론 동북아의 지역적 불안정을 발생시킴으로써 자국의 안보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 기초하여 적극적 개입의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지난 제1차 북핵위기 당시에도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와 같은 적극적 개입에 나서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는데 첫째, 당시의 중국은 1989년 천안문사태의 후유증으로 인해 국제적 고립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또한 국제문제에 개입하여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비용을 지불할만한 여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둘째, 제2차 북핵위기에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다자해결방식'을 고집함으로써 중국의 역할이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으나 제1차 북핵위기 당시에는 한국마저 배제된 북·미 양자해결구도로 진행됨으로써

6) 일레로 램프턴(David M. Lampton) 교수는 중국지도부가 북한을 '강패국가'로 규정하는 한편, 중국 서부의 분리주의 소수민족에게 核물질을 수출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Lampton 2003).

중국의 개입여지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현재상황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III. 북핵에 대한 중국의 시각과 입장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중국 내의 시각과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린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기 위해 시도하는 모든 노력은 그들의 민족자존과 국제적 승인을 얻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북한의 강경 태도는 점차 누그러질 것이며 대화와 타협에 의한 해결이 가능하므로 중국의 입장에서 크게 우려할 바가 못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핵무기를 보유한 이웃이 존재한다는 것은 중국의 국익은 물론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중국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주형 2003, 181-184).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은 이처럼 두 가지로 갈리고 있으나 북핵문제가 발생하게된 근본원인에 대해서는 미국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 대부분 중국학자들의 견해라고 할 수 있다.⁷⁾ 즉 부시 행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9·11 테러사건 이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 대상으로 삼았으며 북한체제와 지도자를 무차별 성토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서두르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도 어느 정도 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기본인식에 있어서는 북한의 핵개발 의도에 대하여 심정적 이해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 압력만으로는 핵문제의 해결이 난망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적어

7) 대표적으로 파오젠이(朴建一)는 북핵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미국에 있으며 부시 행정부가 전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다(朴建一 2003, 42).

도 공식적으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및 실행행사는 긴장을 첨예화시킬 뿐이며 북한이 처한 입장, 즉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고독감과 미국의 단독행동에 의한 선제공격에 대한 경계감에 대해서도 이해를 구하고 있다(朱建榮 2003, 1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다수 전문가와 관료들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안고 있다. 대만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핵개발 경쟁이 초래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⁸⁾ 인접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도의 긴장 및 군사적 충돌에 말려 들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전면적 소강사회의 실현(全面建設小康社會)이라는 국가발전목표와 관련하여 안정되고 평화로운 주변환경 구축이 중국 외교정책의 필수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북한의 핵보유는 동북아의 안정을 저해하고 전쟁발발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국가이익과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등은 미국의 동맹체제 강화와 MD체제 구축을 정당화하고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북핵 사태에 따른 주한미군의 재배치나 전력강화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對中포위전략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다.

중국은 당초 북핵위기가 재연될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이 '체제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방어적 선택' 수단으로 불가피하게 핵문제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중국은 북한의 당면한 경제상황과 낙후성을 감안할 때 재래식 무기개발을 통한 안보체제의 확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 개발은 그들의 기본적 안전확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한 것이다. 때문에 중국은 북핵문

8) 중국은 대만이 1964년 중국의 原爆실험 성공에 자극 받아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 이래로 그동안 미국에 의해 수 차례에 걸쳐 핵개발 시도가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民需用 명목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하여 최근 시뮬레이션 원폭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소개하면서 향후 대만 독립화 경향과 맞물려 핵무기 및 관련장비 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王衛星 2003, 54-57).

제의 해결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안고 있는 “안보상의 취약성을 개선해 가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외국 정상들과 북핵문제를 논의하면서 예외 없이 북한의 ‘체제보장’ 또는 ‘안보우려해소’를 강조하여 왔다. 이는 胡錦濤와 푸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중·러 공동성명’(人民日報 2003/5/29) 및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발표된 ‘한·중 공동성명’(人民日報 2003/07/09)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북한 핵의 위협을 과대평가하고 있으며 경제제재나 군사적 조치 또는 정권교체 등에 의한 외부적 압박정책은 적극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중국은 과거 오랫동안 미국으로부터 심각한 핵위협을 받았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이나 보유가 국가이익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 동기에 대한 동정적 시각’을 가지는 측면이 있다(박두복 2003, 5).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점진적인 핵위기 고조와 벵골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갖게 되면서 북한의 핵개발이 중국의 안보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다 심각하게 평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이징 3자회담에서 북한은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5-6개의 핵폭탄을 제조하기에 충분한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 廢연료봉 재처리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증명하고 核능력을 물리적으로 과시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Niksich 2003, 3). 이러한 북한의 강경태도는 중국과 미국을 실망시키고 나아가 분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 같은 북한의 도발적 발언이 중재노력을 기울여온 중국의 체면을 손상시켰을 뿐 아니라 중국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북핵위기를 나아가게 할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파월 국무장관은 북한이 관심을 끌고 양보를 받아내기 위하여 행하는 위협이나 행동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구태의연한 공갈게임으로 다시 복귀했다고 반박했다(Bandow 2003, 4). 결국 베이징 3자회담은 중·북관계의

긴장을 조성하는 한편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 외에 새로운 동맹국, 즉 러시아를 필요로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의 일부 관변 연구소와 안보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보유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시각들을 개진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북한이 핵카드를 통해 체제보장을 확보 하려는 업포의 차원 또는 협상카드로서의 수단을 넘어 '절대안보' 차원에서 궁극적 억지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보유하려는 이중전략을 추구할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달성을 위해 외교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경제적 수단으로 대체 또는 보완적 수단으로서의 경제적 수단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일부 학자의 경우 북한정권의 붕괴가 장기적으로 중국의 국익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⁹⁾ 한편 중국 정부 내에서도 외교부는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평양과 다소 거리를 두자는 입장인데 비해 군부는 북한과의 전통적 '혈맹관계'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Asian Wall Street Journal* 2003/07/07). 중요한 것은 과거와 달리 중국 내에서 북핵문제를 계기로 등장하기 시작한 이러한 새로운 평가 및 시각의 대두가 胡錦濤 체제 등장 이후 중국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은 물론이고 기존의 북·중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중국사회과학원의 선지루(沈驥如)는 북핵문제로 북·미간 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 핵확산방지체제의 붕괴는 물론이고 동북아에 엄청난 재난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번 기회에 중국은 과거 북한과 체결한 '상호우호 및 원조조약'의 유사시 자동개입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북한이 핵개발의 무모한 모험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이를 對美 설득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

9) 일례로 中國人民大學의 스인홍(時銀弘)은 “남한주도의 통일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미, 일로부터 중국으로 경사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붕괴가 중국의 국익에 반드시 손해로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을 내세운다(Promft 2003).

장한다(沈驥如 2003, 53-58).

중국은 사회주의권 붕괴이후 소위 하나가된 국제체제, 즉 자본주의적 세계체제 속에 자리잡고 있으며 개혁개방정책이후 국가발전을 가속화하고 대외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현재 진행중인 '서부대개발' 이나 '2008년 베이징올림픽' 등 자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 이익에 해로운 일이 빚어지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對中 강경책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치중하고 있으며 중국 외교정책에서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 핵위기는 이러한 중국의 국가이익과 정책목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중국이 궁극적으로 북한을 등지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적극 동참할지는 회의적이지만 적어도 북한 핵문제가 동북아시아의 불안을 조성하고 중국 개혁개방과 국가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해서 거부반응과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할 것이다.

IV. 북핵에 대한 중국의 목표와 정책방향

과거 '순망치한의 관계'(脣齒關係)로 표현되기도 했던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현재 퇴조하는 듯한 인상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하여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단지 이념적 동질성 때문만이 아니라 중국이 金正日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對北 원유 및 식량 공급을 중단할지도 모른다는 북한의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이다.¹⁰⁾ 따라서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10) 일반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경제운동과 생존에 필요한 필수자원 가운데 원유의 70%와 식량의 3분의 1을 무상원조 및 국제시세보다 낮은 우호가격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북한은 99년부터 2001년 사이에는 전량의 원유를 중국으로

확보하고 있는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대하여 어떠한 목표와 정책을 취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이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 확대를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와 맞물리는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하여 기본이해를 갖는 중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개발을 단념시키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목표의 달성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은 첫째,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유지 둘째, 한반도 비핵화의 달성 셋째, 외교적 대화와 타협의 방식을 통한 해결 등 세 가지 기본원칙을 일관되게 천명해오고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정책수행단계에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지만 북한에 대하여 일방적인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압력도 병행하는 전술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례로 비록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중국 고위관계자는 2003년 초 베이징을 방문한 북한의 백남순 외무상에게 핵관련 비량 끝 전술을 재개할 경우 중·북관계에 심각한 긴장이 초래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으며, 중국은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다칭(大慶)유전에서 북한으로 연결된 송유관을 일시 폐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AWSJ 2003/06/30). 중국은 2003년 3월에 사흘간 지속된 원유공급 중단을 공식적으로는 기술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북한의 한반도 긴장악화 행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對北 경고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이유로 金正日 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이는 정권교체 이후 등장하게될 신정권의 불확실성과 북한 내부의 혼란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정권교체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대규모 난민이 유입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 통일되는 것을 불원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원하는 가장 바람직한 북핵문제의 해법은 북한정권을 온전 시킨 채로 핵무기만 보유하지 못하도록 저지

부터 수입하였다(KOTRA북한팀 2003, 24).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을 미국이 받아들일
도록 설득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新지도체제는 미국과 안정적 협력관계의 유지·발전
을 무엇보다 중요한 대외정책기조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핵문
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정책도 이러한 기조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모색
해나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실제로 부시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은 부
시 진영이 중국에 대해 견지해 왔던 강경노선이 현실적 정책으로 연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¹¹⁾
미국과의 안정적 관계구축에 대한 정책의지가 최근 중국에서 출현하고
있는 북한 핵보유에 대한 인식과 결합될 경우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對美공조를 통한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모색으로 나
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실제로 다자회담의 성사과정에서 나타난
중국의 적극적 중개자 역할은 이러한 전망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시에 북한체제의 붕괴 및 그 이후 중국의 안전까지도 고려한 완충지
대 확보라는 점과 연계되는 복잡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북한 체제 붕
괴와 그 이후 전개될 한반도상황에 대한 중국의 평가는 북한 핵문제 해
결에 대한 중국의 정책선택에서 중요한 기초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체제 붕괴이후 한반도 상황전개가 중국의 국가이익이나 정책목표
에 부합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타나리라 판단된다면 중국은 북한체제의
붕괴 또는 북한의 붕괴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정책선택에서
배제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체제 붕괴에 따르는 한반도에서의 급진적
변화는 미국 세력의 일방적 신장으로 연결되고 중국을 위한 안보상의
완충지대인 북한을 소실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즉 중국에게
있어 실질적인 對한반도 이익은 ‘한반도의 통일’이 아니라 ‘한반도의

11) 중국이 취한 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Lampton and Ewing 2002, 38-41).

안정'인 것이다.

때문에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에너지와 식량을 제공하는 원조국가로서 주변국 가운데 가장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레버리지(leverage)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활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 즉 미국 등 서방에 의해 적극 개진되고 있는 무력 사용이나 경제제재 등 외부적 압박수단들은 궁극적으로 북한체제의 붕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정책수단에서 공식적으로는 배격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외부적 압박조치에 중국이 동조할 경우 북한의 중국에 대한 신뢰를 근원적으로 동요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나 특수지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북한체제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에 대하여 근본적 입장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북핵위기의 전개 및 해결과정에 따라서는 중·미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접근과정은 다분히 중국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지난 3월 全國人大 기간 중 탕 자쉬엔(唐家璇) 외교부장이 “‘柔中有強,強柔併濟(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으며 강함과 부드러움이 어루러져 서로 돕는다)’가 중국외교를 대표한다”(人民日報 2003/03/07)라고 밝힌 바와 같이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강·온 양면책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북한에 대하여 압박을 행사하는 국면이 온다해도 중국은 국제사회의 제재 참여보다는 비공개적이며 독자적인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V. 6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역할

기본적으로 중국은 북핵문제의 다자회담방식에 의한 해결을 강조하는 미국의 의도에 대하여 첫째,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화를 추진하며 둘째,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참여국들에 대한 책임분담을 요구하고 셋째,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6자회담의 성사를 위해 노력한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우선 중국은 북핵문제에 대하여 한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입장이 상당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다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결과 도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즉 미국이 의도하는 바와 달리 다자회담이 반드시 북한을 고립시키는 구도로만 작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둘째, 북핵문제는 북·미 양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관련된 문제로서 동북아 주요국의 입장과 이해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중국은 6자회담 개최와 관련하여 먼저 2003년 4월에 열린 베이징 '3자회담'의 성사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즉 중국은 평행선을 달리던 북한과 미국의 만남을 주선할 필요를 절감했고,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압력을 가미한 설득과 권고작업을 은밀히 진행함으로써 북핵위기 해소를 위한 첫 다자회담이 열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비록 3자회담이 구체적인 성과 없이 막을 내렸지만 중국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선에서 후속회담 성사를 위한 중재역할을 지속했고 8월 27일에는 제1차 '6자회담'이 개최될 수 있었다. 중국은 당초 북한이 6자회담 개최의사를 밝히기 전까지는 다자회담에 대한 일·러의 참여에 내심 소극적이었지만 결국은 일본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실제 성과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6자회담 성사를 통한 대화의 모멘텀 지속을 강조하였다.

제1차 6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중국의 외교적 노력은 북한에게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 모두에 대해 전개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 포기과 체제보장 이행의 선·후 및 방식 등을 둘러싼 북·미간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양국의 구체적인 입장을 파악하고 양자를 절충하기 위한 설득과 조율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李肇星 외교부장과 파월 미 국무장관의 전화통화(2003/07/15) 그리고 戴秉國 외교부 부부장의 방미 및 胡錦濤 주석과 부시 미 대통령의 전화통화(2003/07/30) 등을 통해 중국은 다자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중국은 북핵 폐기와 다자회담 개최 등 미국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하는 동시에 북·미 양자접촉과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제공을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함으로써 6자회담에 대한 북·미의 이견을 조정하였다. 또한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이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북한에게는 다자대회에 참여할 경우 미국은 북한과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구상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전달하여 북·미로 하여금 대화 무대로 나오도록 증재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이 핵개발 카드를 제기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위협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미국에게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신상진 2003, 5).

둘째로 중국은 핵심당사국인 북·미 양국뿐 아니라 한국, 러시아, 일본 등과의 직접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북·미간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했다. 중국은 2003년 5월 27일 중·러 정상회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 데 이어 7월 초에는 戴秉國 부부장을 러시아에 파견하였으며 8월 11일에는 베이징을 방문한 로쉬코프 러시아 부외상과 戴秉國 부부장의 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외교공세를 취하였는데 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고 북한과도 남북 정상회담 이후 관계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다자회담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국이 중국에게 對北 설득노력을 요청하였다면 중국은 미국의 양자대화 입장과 대북 안전보장 제공 불가 입장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한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 것이다.

셋째로 중국은 6자회담의 준비기간은 물론이고 진행 중에도 참가국들이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할 것을 유도하였다. 6자회담 개최 직전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李肇星 외교부장은 대화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조성되었다고 전제하고, 다만 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면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한국, 일본을 포함한 각 당사국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국은 6자회담이 열리는 과정에서도 회담이 형식이나 절차로 인해 난관에 빠지는 것을 매우 경계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6자회담 전날 중국측 수석대표인 王毅 부부장은 “대화를 시작했으면 계속해 나가자(談起來,談下去)”, “대화를 통해 결과를 얻어내고 평화를 이끌어내자(談出結果,談出和平)”는 말로 회담의 방향을 제시했다(人民日報 2003/08/27). 그리고 회담폐막 직후에는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는 복잡한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 요인으로 인해 해결을 위해서는 우여곡절의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각 당사국들이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회담을 지속해간다면 문제해결을 이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당사국간의 대화유지(保持對話), 신뢰구축(建立信任), 이견축소(減少分歧), 공감대확대(擴大共感)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人民日報 2003/08/30).

결국 베이징 6자회담은 평화적 해결의 필요성을 부단히 강조해온 중국의 설득과 현 단계에서 중국만이 가지는 특정 기능에 따른 거중조정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회담 참가국들이 ‘求

同存異' 즉 서로 공감하는 부분을 발전시키면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해하고 유보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사안의 복잡성과 극한 대립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의 심각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문흥호 2003, 13).

한편 1차 6자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뒤에도 중국은 2차 6자회담의 개최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전개하였다. 2003년 10월말에는 우방귀(吳邦國) 전국인대 상무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金正日과 회담하고 6자회담을 지속해나가는 데 원칙적 동의를 이끌어 냈다. 또한 12월초에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면서 부시 행정부와 6자회담의 속개문제를 핵심의제로 논의하는 한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중국이 3자회담과 6자회담을 통한 두 차례의 다자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전히 대화지속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6자회담의 제도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다자안보기구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6자회담이 지속되고 정례화될 수 있도록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고위정책협의회를 바탕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정에서 미·일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와도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있으며 단기간 내에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6자회담을 제도화하고 이를 한반도 평화체제협의의 틀로 발전시키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 역시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6자회담 구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6자회담의 정례화 및 제도화를 통해 동북아의 안보와 평화문제를 다루는 다자안보협의기구로의 발전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VI. 맺음말

북한 핵문제를 풀어 가는 데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의 변수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북한의 태도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의지이며, 세 번째로는 중국의 역할을 들 수 있겠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역할과 관련하여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과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대한 전략적이고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에 개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對美관계의 개선은 물론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중국의 시각은 기존의 북·중 관계의 틀을 '지속'하려는 측면과 보다 전향적인 '변화'의 과정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시각이 병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궁극적으로 중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을 단념시키는 것이 최대의 목표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강·온의 양면책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매우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중국의 이러한 노력과 역할은 '3자회담'과 '6자회담'을 주선함으로써 명백히 드러났다. 비록 현재까지 다자회담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으나 북핵위기의 해법을 모색하려는 중국의 역할은 앞으로도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이 향후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큰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다음의 세 가지 문제가 예상될 수 있다. 첫째는 기본적으로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일정한 조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유도는 사실상 무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마후역할을 선호하고 정치적 모험을 원치 않는 중국의 전통적 입장으로 인해 중국이 북핵위기 해결을 위한 과정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국제사찰에 참여할 정도로 자신을 노출시킬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부시 행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주도적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해줄 것인가 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북핵 위기가 고조될수록 뚜렷한 대안이 등장하거나 여타의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국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의 건설적 중재역할이 극대화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즉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관련국 합의 사항인 '평화적 해결원칙'을 미국에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미국 내의 강경파가 득세하는 것을 견제하고 중국의 역할수행에 대한 명분과 체면을 살려줄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한·미·일 3국간 협의체인 '대북정책조정그룹(TCOG)'과 유사한 형태로서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한·중 양국간에 상시협의체 구축을 검토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6자회담의 제도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다자안보기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6자회담이 지속되고 정례화될 수 있도록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중국에 대하여 6자회담을 통해 그들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강대국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대만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미국과의 대화창구를 유지하기 위한 채널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보장되는 형태의 지역다자안보대화체제에 대하여 미국이 부정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미 안보협력을 긴밀히 유지하면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도 핵심과제라 하겠다.

참고문헌

- 김태호. 2003. “북핵문제와 중국의 변화.” 단국대학교분쟁해결연구센터 하계학술대회 발표문(2003/07/21).
- 문홍호. 2003.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인식과 정책기조.” 한국국제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문(2003/09/23).
- 박두복. 2003.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역할.”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 박병광. 2003. “중국의 지도부개편과 중·북관계 전망.” 『국제문제연구』 3(2).
- 신상진. 2003. “북핵6자회담과 한·중의 역할.” 한국국제정치학회중국기획회의 발표문(2003/12/12).
- 이종선. 2003. “다자적 접근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 및 북한의 대응.” 민주평통 주최 학술회의 발표문(2003/08/21).
- 이주형. 2003. “중국의 대한반도정책과 북한 핵문제.” 『국제문제연구』 3(4).
- 이춘근. 2003. “최근 동북아시아 군사·안보환경 변화와 전망.” 『국제문제연구』 3(4).
- KOTRA북한팀. 2003. 『2002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서울: KOTRA.
- 朴鍵一. 2003. “北京六方會談與朝鮮核問題前景.” 『當代亞太』 10.
- 沈驥如. 2003. “維護東北亞安全的當務之急：制止朝鮮核問題上的危險博奔.” 『世界經濟與政治』 9.
- 朱 鋒. 2003. “六方會談後的朝鮮核危機 問題與前景.” 『現代國際關係』 9.
- 王衛星. 2003. “臺灣核武器之謎” 『世界知識』, 10月 16日.
- 朱建榮. 2003. “中國で 變化する朝鮮半島の戰略的位置.” 『世界週報』 7月 23日.
- 『人民日報』, 2003年 3月 7日; 2003年 5月 29日; 2003年 7月 9日; 2003年 8月 27日; 2003年 8月 30日.
- Amacost, Michael. 2003. “Addressing the North Korea Nuclear Challenge.” *Policy Paper*. Stanford University Asia/Pacific Research Center, April 15.
- Bandow, Doug. 2003. “All the Players at the Table: A Multilateral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Policy Analysis* 478.
- Bremner, Brian. 2003. “The Baghdad Effect: Why North Korea may Rethink Brinkmanship.” <http://www.businessweek.com/print/magazine/>

- content/03_16/ b3829620.htm?gb&sub=0312iraq (검색일: 2003/04/28).
- Kim, Samuel S., and Tai Hwan Lee. 2002. "Chinese-North Korean Relations: Managing Asymmetrical Interdependence." Samuel S. Kim and Tai Hwan Lee, eds. *North Korea and Northeast Asia*. New York: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 Lampton, David M. 2003. "China: Fed Up With North Korea?" *Washington Post*, June 4.
- Lampton, David M, and Richard Daniel Ewing. 2002. *U.S-China Relations in a Post-september 11th World*. Washington D.C: The Nixon Center.
- Niksch, Larry A. 2003.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CRS Issue Brief for Congress*. Washington, D.C: The Library of Congress, June 9.
- Promft, John. 2003. "As Talks Begin, China Views North Korea as Risk." *The Washington Post*, August 27.
- Park, John S. 2003. "A Chinese Roadmap Korea." *Asian Wall Street Journal*, June 30.
- Asian Wall Street Journal*, July 7 2003.

China's Current Position and Policy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PARK Byungkwang

Research fellow,
The Resear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RIIA)

This article elaborates on China's position and policy towar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especially Beijing's perception and role of solving the nuclear crisis in Korean peninsula since the October 2002. Although changing the traditional "lips-to-teeth"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China is the world's last remaining major country which still has the influence over North Korea. To solve the second nuclear crisis in Korean peninsula, Chinese government emphasizes following three principles: first, maintenance of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second, realization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ird, peaceful settlemen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rough the dialogue between the related nations. China has played a decisive role in persuading Pyongyang to participate in the six party talks last August and again in convincing North Korea to consider Washington's offer of multilateral security assurances. The U.S. and China share the objective of eliminat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but Beijing remains unwilling to cooperate with the United States to

achieve this objective through reliance on coercive measures that would destabilized North Korea. In dealing with Pyongyang, China is uniquely positioned to exert its influence. Beijing's willingness to assume an active diplomatic role has been welcomed by United States and has provided a substantial boost to Sino-American ties.

Key Words : North Korea, China, Korean Peninsula, Nuclear Issues, Six Party Talks.